

비상경제장관회의

23-11-4

(공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촉진방안

2023. 4. 6.

관계부처 합동

목 차

I. 추진 배경	1
II. 현황 및 당면과제	2
III.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6
1.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7
2. 지역중소기업 창업-성장 기반 보강	12
3.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18
4. 지역중소기업 혁신 지원체계 활성화	22
IV. 향후 추진계획	24

I. 추진 배경

- 지난 20여 년간의 균형발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
 - 수도권-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는 커지는 추세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혁신역량은 낮은 수준에서 정체
 - * 비수도권의 지역내총생산(GRDP) 비중(%) : ('10) 51.6 → ('15) 49.9 → ('20) 47.5
 - 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인력 비중(%) : ('18) 30.2/38.2 → ('19) 30.1/37.5 → ('20) 30.8/37.1
 - 인구감소·관심지역 대부분이 비수도권에 해당('20년, 107개 중 100개, 93.5%)하는 등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소멸 위기마저 가시화
- 그간의 지역정책은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괴리되어 중요한 축인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 정책은 다소 부족
 - * 국민의정부지역산업육성정책 시범 → 참여정부지역산업육성정책 본격화 → 이명박정부광역경제권 개념 도입 → 박근혜정부주민체감형 지역산업 → 문재인정부산업·공간·사람 3대 전략
 - 그 결과 글로벌경제 변동으로 지역중소기업이 더 큰 리스크를 겪게 됨에 따라 혁신적 지역중소기업의 자생력과 체력을 강화할 필요
- 지역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고 지역경제의 기초가 되는 '지역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이 중요

⇒ '지역주력산업 개편'(2.16, 비경장관회의)과 연계하여, 향후 5년간 정부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방향으로서 동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 "지역중소기업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산다"는 기치 아래,

- ① 지역 산업생태계 속에서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관점을 강화하고,
- ②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이 동참하는 정책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 ③ 향후 지역을 고려한 분야별 대책*을 연속적으로 수립·발표할 예정

* (안)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전략」,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전략」, 「중소기업 구조개선 종합 지원대책」,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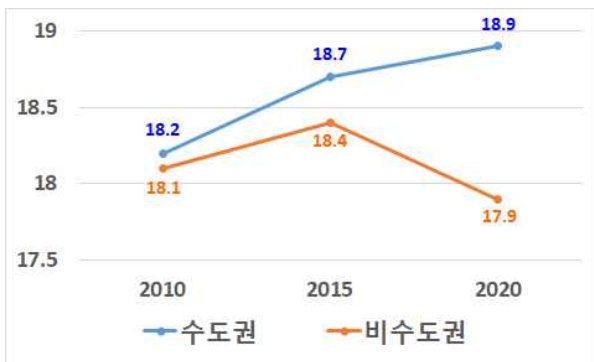
Ⅱ. 현황 및 당면과제

① 지역 및 지역중소기업 현황 및 문제점

< 지역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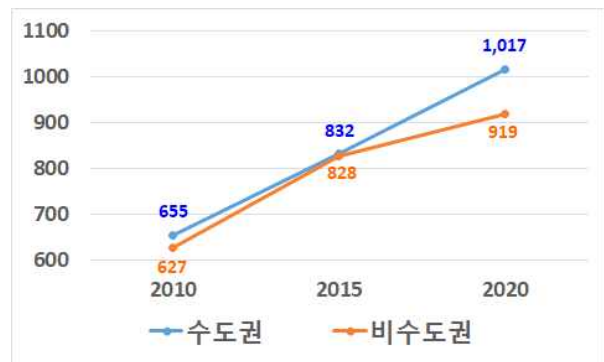
- **(지역인구생산)** 지역별 생산가능인구와 지역내 총생산 모두 수도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비수도권과 수도권과의 격차가 확대 추세
 - 수도권의 생산가능인구 및 지역내 총생산은 계속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지역내 총생산 증가도 둔화

< 생산가능인구(백만명) >



*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주민등록인구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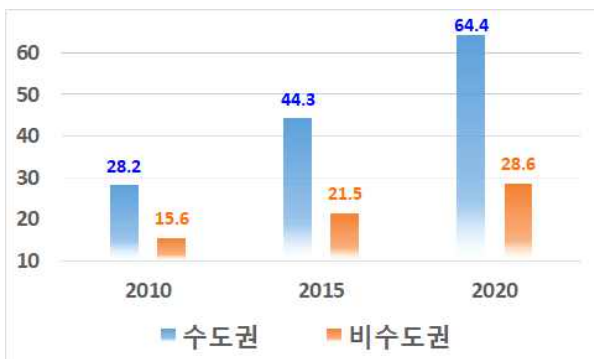
< 지역내 총생산(조원) >



* 출처: 통계청, 지역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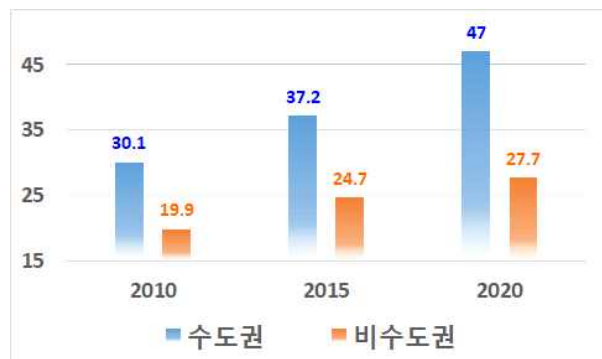
- **(연구개발)** 비수도권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인력 규모는 수도권의 절반 수준으로, 수도권과의 상대적 격차는 계속 확대

< 연구개발비(조원) >



*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활동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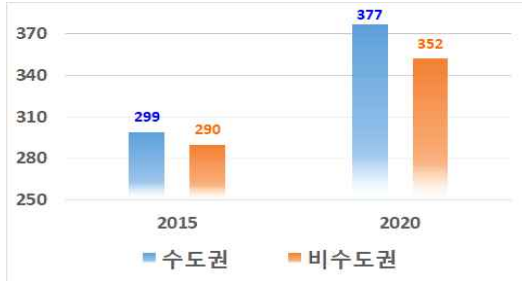
< 연구개발인력(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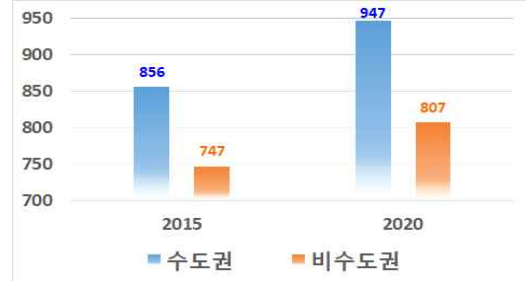
< 지역중소기업 현황 >

□ **(중소기업)** 기업체·종사자 모두 수도권에 50% 이상 분포

< 중소기업 기업체 수(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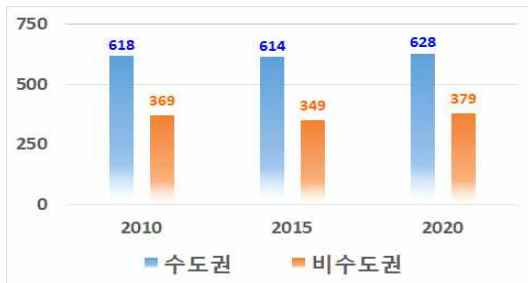
< 중소기업 종사자 수(만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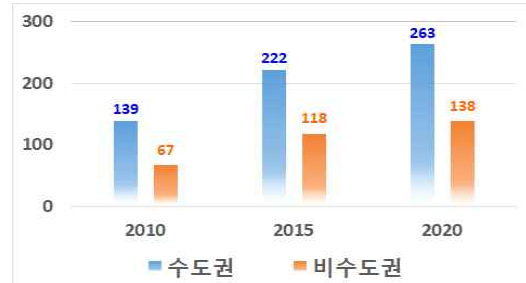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기본통계

□ **(수출연구)**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수출액, 기업부설연구소는 수도권의 절반

< 중소기업 수출액(억달러) >



< 중소기업부설연구소(백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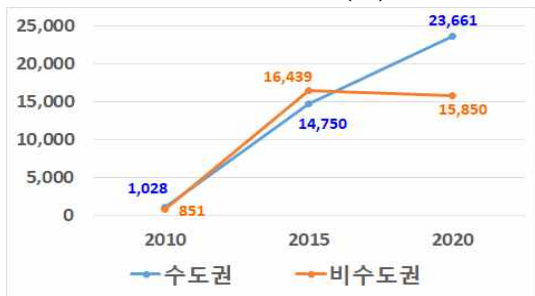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중소중견기업수출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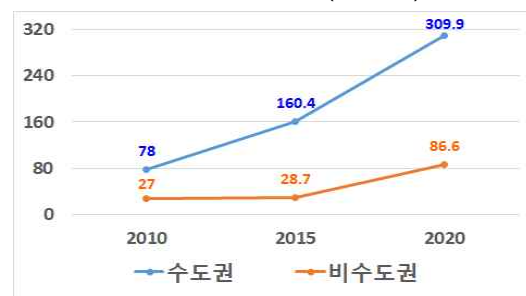
*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연구소현황

□ **(벤처투자)** 수도권의 벤처기업 수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감소하고 있고, 벤처투자 규모의 격차도 확대 추세

< 벤처기업 수(개) >



< 신규 벤처투자(백억원) >



* 출처: 벤처기업협회(벤처인 사이트)

* 출처: 중기부 투자관리감독과

◇ 생산가능인구, 혁신역량, 벤처투자 등 지역 및 중소기업 성장 요인의 수도권 쏠림현상은 심각한 상황으로,

◇ 지역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별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

2 당면과제

① 지역중소기업 관점의 지역육성 전략 부재

- 지난 6년간('17~'22년) 1.8조원 (국비 1.3조원, 지방비 0.5조원)을 투입하여 지역주력산업 분야의 중소기업 2.8만개를 지원
- 그러나 지역별·산업별로 구분*하는 칸막이식 지원으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지원전략에 지역중소기업에 대한 관점이 미흡

*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을 구분하고 산업분류코드 기준에 따라 지원기업 선정

②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정책적 배려 미흡

- 중소기업 지원규모*의 확대, 정책영역의 확장 등으로 중소기업의 창업·성장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

* 예산(조원, 중소벤처기업부 기준) : ('10) 6.0 → ('15) 7.9 → ('18) 8.9 → ('20) 13.4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 지역의 창업·성장 여건은 여전히 열악하고 추가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상황

③ 사후적 조치 위주의 위기 대응

- 지역위기에 대한 지원기준·목적(산업위기, 고용위기, 자연재해 등)에 따른 사후적 조치* 위주의 대응체계는 구축된 상황

*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중기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산업부), 고용위기지역(고용부) 등

- 그러나 지역기업의 위기 징후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위기의 확산, 재생산을 선제적으로 방지하는 예방적 대응에 대한 고려가 부족

④ 지역 내 기업 지원기관 간 협업관계 미약

- 지역 내 기업 지원기관*이 다수 존재하나 지역 지원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지역중소기업의 실제 체감도는 미흡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테크노파크(TP), 창조경제혁신센터, 중진공·소진공 등 지역본부 등

현장의 목소리

“지방중기청이나 기관에서 현장 애로나 건의사항을 매년 조사하지만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대답이 없습니다.”('22.6월, 지역기업)

Ⅲ. 추진전략 및 정책과제

비전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지역경제 도약으로 대한민국 지방시대 실현
-----------	--

목표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지역중소기업 중심의 혁신생태계 조성” 2023~2027년까지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 +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개 창출 + 지역협업 모델 100개 발굴
-----------	---

전략	핵심 대상	추진과제
1.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주력산업 성장주도기업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기업육성 전략 개선
	성장잠재기업	②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 ③ 지역중소기업의 전략적 협업 및 교류 강화
2. 지역기업 창업-성장 기반 보강	성장잠재기업	④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⑤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 개선 ⑥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 허브로 고도화
3. 지역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위기 기업	⑦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⑧ 지역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 지원 ⑨ 지역소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활력 회복
4. 지역기업 혁신 지원체계 활성화		⑩ 지역 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정비 ⑪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기능 효율화 ⑫ 지역중소기업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전략 1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1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기업육성 전략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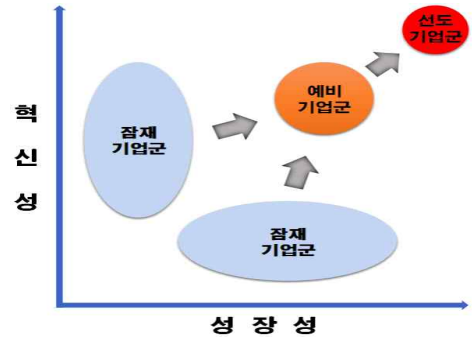
※ 14개 비수도권 지역의 주력산업(48개)을 기술 성숙도, 산업 기반, 기업 공급망을 고려하여 “주축산업(41개) 및 미래 신산업(19개)”로 개편조정 (‘23.2)

◆ 기업의 자발적 혁신과 중앙-지자체의 지원을 토대로 성장단계별·협력·성과지향 전략 → 지역성장 주도기업 300개 육성

□ [성장단계별] 기업 성장단계에 따른 차별화된 지원으로 성과 극대화

- (유형화) 지역 주축산업* 분야 기업을 혁신성·성장성 기준으로 ‘잠재-예비-선도기업’으로 구분

* 기술 성숙도가 높고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은 산업(41개 선정)



- ‘27년까지 잠재기업(7천개) 및 예비기업(3천개)을 발굴·지원하여 지역 주축분야의 선도기업 280개 육성 신규

- (맞춤형 전략) 기업의 성장단계별 특성, 수요 등 분석을 기반으로 기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성장전략 수립·지원 신규

< 지역 주축기업 성장전략(안) >

	잠재기업	→	예비기업	→	선도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창출 위한 연구개발 지식재산 출원, 제품성능 인증, 연구장비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시장 개척 위한 연구개발 연구개발 기획지원, 투자유치 지원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밸류체인 기반 공동기술개발 시장 개척, 마케팅, 국제 표준규격 인증지원 등
예시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창업 육성 플랫폼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 대학 등)에서 선별·추천하는 혁신 창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선별 우수(스타)기업, 벤처투자기업, 창업경진대회 수상 등 성장성 높은 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으로 사업 다각화 및 기술·경영 독립성 있는 지역 기여도가 높은 기업

□ **[협력기반] 지역-지역, 지역기관 간 협업으로 지역 신성장 동력 창출**

- **(지역간 협력)** 단일 지역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수소, 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분야는 지역 간 협력으로 초광역권 선도기업 20개 육성 **신규**

< 지역협력형 미래 신산업 선정 결과('23.2) >

국가전략기술	지역	국가전략기술	지역
수소 저장·운송	부산/울산	유전자·세포 치료	대전/경북
	경남/제주	차세대 고성능 센서	대구/강원
반도체 첨단 패키징	충남/충북/광주	리튬이온전지 및 핵심소재	전남/전북

- R&D·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융자, 보증 등 자금 후속 지원

* (안) 미래 신산업 분야 R&D 기획지원 → R&D → 사업화 → 자금

- **(산학연 협업)**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지역 내 산·학·연 공동으로 R&D 기획·사업화 추진 **신규**

* 지역의 역량·자원을 고려하여 5년간 핵심기술 확보전략 및 수행계획

□ **[성과지향] 인센티브 예산 비중을 확대하여 지역 간 경쟁 촉진**

- 14개 지역 균등배분 외에, 지역주력산업 분야 기업육성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예산의 비중을 30%까지 점진적 확대(현행 10%)

* (예) (기존) S등급 3개 지역, 지역별 10억원 → (개편) S등급 2개 지역, 지역별 30억원

[지역주력기업 육성전략 개편]

지역산업	<기존>	<향후>	
	주력산업	주축산업	미래 신산업
기업선정	성장단계별·협력 방식별 구분 없음	성장단계별 기업 · 잠재 → 예비 → 선도기업	협력방식 · 산·학·연 컨소시엄 · 초광역권 선도기업
기업지원		성장단계별 패키지 지원 (기술개발 및 사업화)	상용화 중심의 공동 R&D, 융자·보증 연계 후속 지원
배분방식		균등배분(70%) + 인센티브(30%)	
예산(국비)	연 2,000억원	중기재정 및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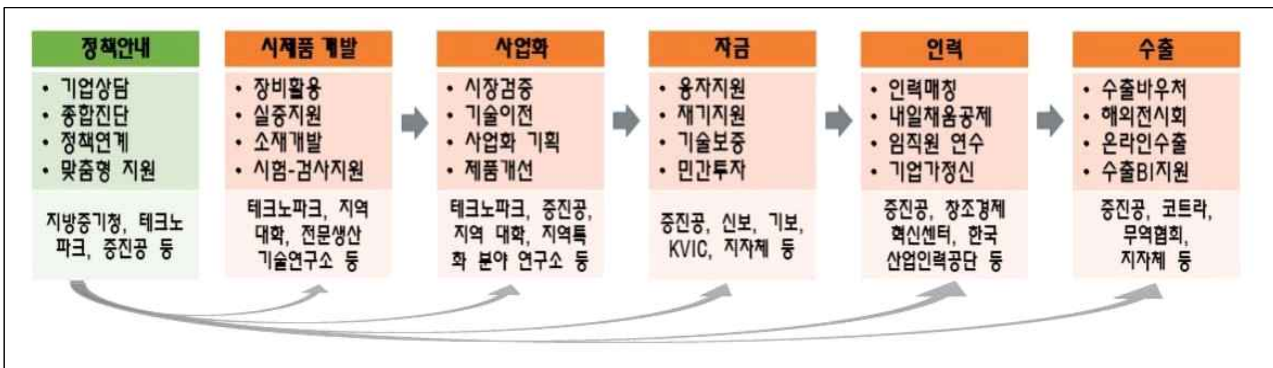
2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

◆ 다양한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프로젝트 방식의 지원 확대

→ '27년까지 17개 지역에 300개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운영

- **(전략적 기획)** 지역경제 상황 및 기업의 요구, 지역 내 지원기관 역량 등을 반영한 프로젝트 방식의 전략적인 기업지원을 본격 추진
 - 정부(지방중기청)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지역 자율적으로 특화된 프로젝트를 설정하고 필요자원 및 역량을 총동원
- **(원팀 협업)** 프로젝트별 협약에 의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참여기관 간 원팀으로서 경계 없는(seamless) 협업관계 구축
 - * 지역 내에 형성되어 있는 기관 간 관계, 지역 내 평판, 기관 간 상호신뢰 등 지역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가 가능
- **(이어달리기 지원)** 분야별 지역 지원기관의 정책 매칭 및 컨베이어 형태의 패키지 지원으로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23) 참여 지원기관의 정책 매칭 위주 지원 → ('24~) 프로젝트 전용 예산 검토
 -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정부 및 지자체 자체 사업 등을 메뉴판으로 만들고, 메뉴판의 대상사업들은 비수도권에 우선 지원

< 이어달리기 지원(안) >



- **(지역확산)** 선도사례 벤치마킹 등을 위한 프로젝트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27년까지 17개 지역에 300개 프로젝트 창출·성공

① [전남] e-모빌리티 기업 생태계 조성 프로젝트

- (추진배경)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지정('19.7~)으로 핵심부품 국산화율 제고(80%→90%), 비용 절감, 안정적 부품 공급망 구축
- (참여기관) 전남도·영광군·순천시, 동강대학교, 중진공, 전남TP, 한국자동차연구원·한국전기연구원, 모빌리티협회 등 기업지원 기관
- (추진내용) 이모빌리티 협동조합 설립 및 양산단지 조성, 입주기업 맞춤형 연계지원, 기술융합 통한 부품 표준화 모델개발 등

② [경남] 안전전략산업(원전·우주·항공·방산) 육성 프로젝트

- (추진배경) 경남도의 지역산업(원전·우주·항공·방산) 육성 의지
- (참여기관) 경상남도·창원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항공우주, 두산 에너지(주) 등 17개 기관
- (추진내용) G-belt 플랫폼 Plus+ 협약기관 간 금융, 기술 등 정책사업 연계 지원, 신속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③ [강원] 액화수소 분야 중소벤처 육성 프로젝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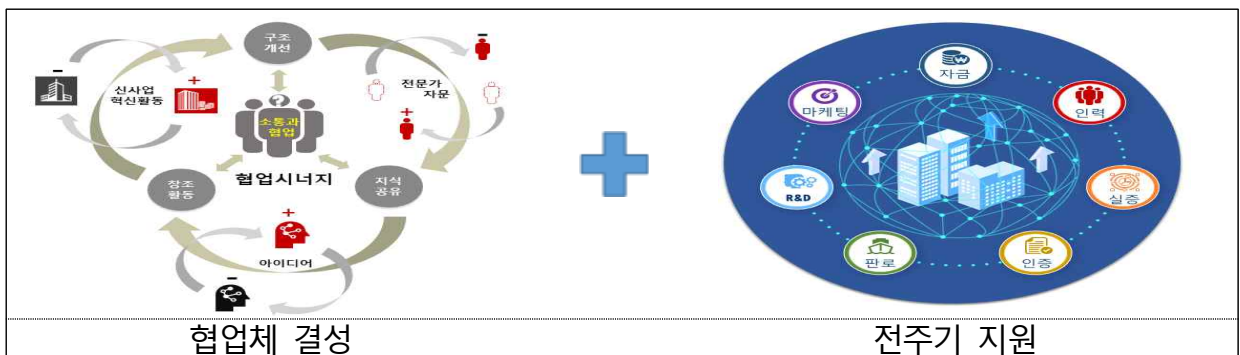
- (추진배경) 동해, 삼척 등 '액화수소 규제자유특구' 지정('20.7~)으로 저탄소·친환경 산업 육성
- (참여기관) 강원지방중기청, 지자체(강릉시·동해시·삼척시·평창군), 강원TP, 중진공, 강원조달청, 강원대, 강릉원주대 등
- (추진내용) 액화수소 협동화 사업(공동 원자재 구매, 연구개발 등), 구조개선 등 정책자금 지원(중진공), 시제품제작·마케팅·전시회 등(강원TP)

3 지역중소기업의 전략적 협업 및 교류 강화

◆ 지역 내 기업 간 협업·교류를 통한 지역기업의 성장 기회 확대
 → '27년까지 17개 지역별 대표 협업모델 100개 이상 발굴

- **(협업모델 확산)** 4차 산업혁명 등 융복합 시대에 지역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기업 간 협업 및 교류를 통한 융합이 필요
 - * 산업연구원 조사(22.11) 결과, 중소기업 간 협력·교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71.6%
 - 지역기업의 **협업 활동 쉰주기***에 대해 R&D, 특허·인증 획득, 공정개선, 판로 확대, 우대 자금(협동화 자금) 등 연계 지원강화
 - * 협업과제 기획 → 협업 매칭 → 기술 및 제품개발 → 사업화 → 생산 → 유통
- ⇒ '27년까지 17개 지역별 대표 협업모델 100개 이상 발굴

< 지역중소기업 협업모델 및 지원 >



- **(협업기반 구축)** 지역중소기업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 **(협업매칭 플랫폼)** 협업기업 Pool 구축 및 중개, 전문가 매칭, 협업 계약 체결·변동 관리 등 협업 통합지원체계 마련 **신규**
 - **(분쟁방지·조정)** 협업기업 간 손익배분, 기술·아이디어 탈취 등 협업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조정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신규**
 - **(기업교류 촉진)** 벤처, 수출, 기술혁신 등 분야별 지역의 우수기업* 네트워크를 조직화하여 지역기업의 교류·협력 제고 **신규**
- * 지역선도기업, 천억벤처, 글로벌강소기업, 스마트제조 선도기업, 기술혁신 우수기업 등

◆ 지역의 자원·역량, 성장 가능성 등 지역기업의 여건을 반영한 지역별 맞춤형 창업-성장 생태계 구축

4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지역창업 활성화 등을 포함한 『(가칭)스타트업 코리아 대책』 발표 예정('23. 上)

□ 지역의 특색과 강점을 살린 창업·벤처기업 밀집지역 조성

- (지역특화 창업벤처밸리) 인재, 기술, 산업·기업 등 지역의 자원·역량 등을 고려하여, 선별되고 차별화된 지역특화 혁신생태계 구축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와 인천시가 협력하여 인천 송도에 조성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표 바이오기업과 창업·벤처기업, 대학과 연구기관, 대형 병원, 중소기업 지원 기관 등이 모이는 'K-바이오랩 허브' 사례를 벤치마킹

< 대표사례 : K-바이오랩허브(인천 송도) >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목적)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는 집적형 특화지원 체계 구축
	• (특화분야) 의약 바이오 분야(후보물질 발굴→ 사업화)
예산	• 9년간('23~'31) 총 2,726억원(정부 1,095 + 인천 1,550 + 민간 81)
대상	• 단백질의약품, 항체, 백신, 세포·조직치료제 등 8대 분야 신약개발 창업기업
지원 내용	• (시설·장비) 바이오 연구시설·장비, 입주공간, 공동체(커뮤니티) 시설 등
	• (프로그램) 바이오 R&D 및 사업화, 산·학·병·연 협업 및 네트워킹, 시험분석·검사·제조 서비스, 법률·행정·특허 등 바이오 스타트업 특화지원

⇒ 지역주축산업·미래 신산업 등 특화 분야 창업·벤처기업, 지역 지원기관 등이 모이는 지역특화 혁신생태계 조성 방안 마련 ^{신규}

* 창업중심대학 등 지역 창업인프라,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과 연계 추진

- **(창업벤처 집적)** 지역의 대학, 연구소 등 혁신기관 등의 인력·기술·자원 등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창업·벤처기업 집적지역을 조성
 < 대표사례 : 관악 S 밸리(서울 관악) >

구분	주요 내용
개요	• 서울대의 우수인재와 기술력, 청년 자산을 기반으로 대학-기업-지역이 상생하는 창업중심지(낙성벤처밸리+신림창업밸리+서울대밸리)로 조성
현황	• 서울대학교, 서울대 연구소(263개), 기업부설연구소(81개), 중소기업(595개), 벤처기업(124개) 등 집적
지원 내용	• (제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창업인프라 구축('22. 16개소) • (프로그램) 창업기업 성장지원(투자지원, 역량강화, 마케팅 등)

- 창업중심대학, 캠퍼스혁신파크, 지역 팁스타운('23. 포항) 등 인재, 기술, 투자 등의 창업 역량을 집결하는 지역거점 구축·확대
- 제조 분야의 초기 창업기업을 위해 첨단제조 인큐베이팅센터(포항), 공유공장(충북) 구축 등 제조 창업 공간·장비 지원
- * (정부) 인프라 구축 비용의 일부를 지원
 (민간 전문기관) 제조 공간 및 장비, 제조 공정개발 등 제조 인큐베이팅 지원

- **(인프라 효율화)**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보육센터(BI) 등 지역창업 인프라의 '창업 준비-성장-도약' 단계별 특화기능 강화
- * (개선안) 창업준비(중장년, 1인창조) → 성장(BI) → 도약(창경) 등 단계별 특화

□ 지역기업에 투자하는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 **(근거법 정비)** 민간 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적 정의, 운용주체 명시, 투자 의무 및 행위제한 등에 대한 특례규정 도입 등
-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완료('23.3)
- **(세제 지원)** 모펀드 출자·운용·회수 단계별 세제 인센티브 마련
- 모펀드 출자액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모펀드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모펀드 출자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

5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 개선

□ [인력] 지역중소기업 수요인력 양성 및 공급

- **(중소기업 인재대학 도입)** 지역기업 수요에 따라 특정 전공, 전 학위 과정(학·석·박사)의 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인재대학 지정
 - * 중소기업 재직자를 대상 학위취득(전문학사~박사, 학위당 2년)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핵심 인력으로 육성하는 선취업-후진학 방식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 지역주력산업 중심으로 중소기업 계약학과를 확대하여 지역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핵심 인재의 경력 개발·관리를 지원

인재 대학 예시

- 충북(뷰티·바이오)-충북대 화장품산업학과 : 현행석박사 → 신설학사과정
- 대전(바이오헬스)-건양대 의료인공지능학과 : 현행석박사 → 신설학사과정

- **(R&D 인력지원)** 지역중소기업에 이공계 대학생 인턴 채용*, 재직자 대상 디지털 석·박사 재교육** 등 산학협력 및 취업 활성화 지원
 - * 지역중소기업 R&D 인턴지원 (4개월, 월 170만원)
 - ** 지역지능화 인재양성 대학 (23, 12개 지역)
- **(지역협력형 내일채움공제)** 지자체, 지역 공공기관·대기업이 지역 중소기업(협력사)의 납입금을 지원하여 지역 인력의 장기 재직 유도
 - * ('22년) 약 1만명 지원 → (~'27년) 약 1.5만명 지원 (+50%)
 - ** 【납입구조 예시】 (기본) 중소기업(1) + 중소기업(1)
→ (협력형) 중소기업(1) + 중소기업(0.5) + 지자체, 지역 앵커기업 등(0.5)

사례

- (경남) 지역주력산업(첨단항공부품) 청년일자리 지원을 위해 경남도와 지역의 앵커기업(한국항공우주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간 협업
- (대구) 지역주력산업 분야 및 ESG 추진 중소기업의 재직자 지원(연300명)

- **(가칭중소기업 인재마을 조성)**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에 교육, 여가 등이 가능한 공간을 구축하여 지역인재 유입·취업 촉진
 - * 행안부(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국토부(지역활력타운 조성) 등 관계부처 협업

- **(혁신 지역인재 양성)** 지역 내 혁신주체 간 협업을 통해 디지털, 인공지능(AI) 등 지역의 발전계획과 연계한 첨단핵심 분야 인재 양성 추진
 - 지자체-대학-혁신기관 플랫폼이 지역기업 수요 기반의 프로젝트 랩, 채용 연계형 인턴십, 창업 프로그램 등 기획·운영

사례 • (충북-기업트랙) 바이오헬스 관련 지역 내 62개 기업과 연계하여 참여 학생들이 현장실습 등을 실시하고 163명 채용 연계('22)

-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를 확대·개편*하여 지역의 특화산업과 연계한 디지털 분야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
 - * (기존) 인공지능, 블록체인 중심 → (확대) 데이터, 네트워크 등 디지털 신기술 전 분야

□ [금융] 지역의 기업 간 협력을 유도하는 정책자금 운영 및 지원 확대

- **(네트워크론)** 협력 중소기업*이 납품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받고, 구매기업이 상환하는 정책자금 지원^{신규}
 -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대·중견·중소기업(지역 주축산업·미래 신산업 분야 위주)의 협력 중소기업
- 1회 평가 후 생산기간 내 수시 활용(한도거래 방식) 등으로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및 구매기업과 장기적 파트너십 구축 유도

<일반 운전자금과 '네트워크론' 비교>

구분	일반 운전자금	네트워크론(안)
지원내용	인건비, 개발비, 원부자재 구입 등 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전반적인 운영자금	납품발주서를 기반으로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운전자금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의 개별 중소기업	중진공 MOU 체결기업의 협력 중소기업
지원기준	기업 종합평가(기술사업성 등) 근거	발주서 또는 거래실적 근거
대출기간	5년 이내(2년 거치) → '장기자금'	180일 이내(최대 360일) → '단기자금'

- **(규모 확대)** 지역 선도기업, 규제자유특구 기업 등 지역의 혁신기업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
 - * 지역 혁신기업 지원 목표(잠정, 억원) : ('22) 2,000 → ('23) 6,000 → ('24) 8,000
- **(한도 상향)** 바이오, 미래차 등 지역별 대표 신산업 분야는 기업당 지원 한도를 최대 100억원 (일반기업 60억원)까지 상향

□ [수출·판로] 지역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확대 지원

- **(지역기업의 수출기업화)** 수출실적이 없는 지역 혁신기업에 수출 바우처*를 우선지원**하여 수출기업화 유도

* 해외 전시회 참가, 디자인 개발 등 해외 마케팅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23. 1,200억원)

** 내수·수출초보 기업 지원예산(480억원)의 50%를 비수도권에 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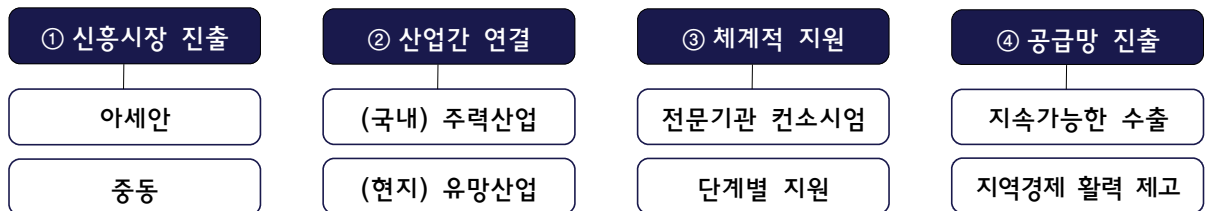
-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역 혁신기업 글로벌 역량 진단* → 전문기관 컨소시엄 등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 단계별 글로벌화 지원

* 기술 및 글로벌 역량 수준, 진출 대상국가(예: 아세안, 중동)의 유망산업과 매칭 가능성 등을 토대로 기업별 공급망 진출단계 구분("진입" → "형성" → "안정화")

** (국내) 글로벌 역량 진단 결과 등에 따른 자금, 인력 등 연계 지원

(현지) 네트워크 구축, 전문기관 협력 및 법인설립, 인력확보 등 기업활동 지원

< 지역기업 글로벌 공급망 진출 지원(안) >



- **(온라인 수출 확대)** 지역기업의 불리한 수출 여건을 고려하여, 전자상거래, 메타버스* 등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지원 확대

* (사례) 메타버스 수출 플랫폼 구축 및 수출상품 콘텐츠 제작 지원(대구·충북, '22~)

- 글로벌 쇼핑몰, 국내 전문몰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역중소기업의 입점, 기술, 마케팅 등 수출 활동 지원

- **(수출지원체계 정비)** 지역내 수출 중소기업 지원창구인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을 기업 밀착관리 서비스 중심으로 개편*

*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평가 등은 이관하고 유망 중소기업별 1:1 전담관 지정 등을 통해 기업 애로사항을 상시적으로 밀착 모니터링

6 지역을 신산업의 요람이 되는 규제혁신 허브로 고도화

□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및 성과 확산 촉진

- **(참여 활성화)** 경쟁력 있는 특구유입을 위해 신청자격을 광역지자체에서 기초지자체(특례시 포함), 초광역 특별지자체까지 확대(특구법 개정)
 - * (현행) 광역지자체 → (개선) 광역 + 기초 + 특별지자체
- 또한, 실증특례 참여 희망 사업자는 주소지 이전 없이 특례를 받아 타 사업자 실증시설 등을 활용한 실증이 가능토록 개선('23~)
 - * 단, 재정지원(R&D 등), 세제감면 등의 인센티브 적용은 제외
- **(실증 활성화)** 대형·고난이도 분야(수소 등)의 실증기간 확보를 위해 2년의 실증기간을 사업 특성에 따라 최대 4년까지 확대(특구법 개정)
 - * (현행) 2+2 (최초 2년, 1회 연장가능) → (개선) 4+2 (최초 4년, 1회 연장가능)
- 최초 지정목적·취지 범위 내에서의 특구계획 변경(사업자 추가 등)은 신속 추진이 가능토록 사전공고 및 부처협의 기간 단축(특구법 개정)
 - * (현행) 공고, 부처협의 각각 30일 필요 → (개선) 공고, 부처협의 각각 15일로 단축
- **(성과창출 촉진)** 내실있는 특구사업계획 기획을 위해 '특구 후보제도*'를 도입하여 사업기획(규제여부, 중복성, 특례부여 방향 등) 밀착지원('23~)
 - * 지자체가 부처협의, 사업성 검토, 사업자 모집 등을 사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新 지역혁신 클러스터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신규}

※ 지역기업의 글로벌화 거점 『(가칭)글로벌 혁신특구 조성방안』 발표 예정('23. 上)

- 권역별로 혁신기업의 지역 유치 및 글로벌 경쟁력 확보 지원을 위한 혁신특구를 지정하고, 투자·규제특례 등 전폭 지원

◆ 지역중소기업의 「지역단위 위기관리 + 분야별 위기관리 + 위기 지역 내 기업 성장지원」으로 촘촘한 지역 위기관리 체계 구축

7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 [데이터 기반] 현장 밀착형 위기 징후 모니터링 확대

- (모니터링 확대) 지역별 위기지원센터*를 추가 설치하고 위기 징후 모니터링 대상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등)도 확대
 - * ('22) 5개 지역(부산·대구·강원·전남·경북) → ('23) 비수도권 12개 지역으로 확대
- (현장정보 활용) 테크노파크(TP)·유관기관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중소기업 밀집지역에 대한 위기징후 정밀 진단

□ [체계적 관리] 중앙-지역 간 협력 기반의 지역 위기관리 체계 정립

- (위기단계 결정^{중앙+지역})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지방중기청 주도)에서 지역별 위기 단계를 결정(연2회)
 - * 지역별 위기 단계는 '양호-주의-심각'으로 구분
- (예방계획 수립^{지역}) 각 시도는 주의, 심각 단계의 지역에 위기 발생, 확산 방지를 위해 R&D, 자금, 사업전환 등 1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
 - * (지역) 기업 수요 반영한 위기에방계획 수립 → (중앙) 계획 이행 점검 및 관리 지원
- (선제적·맞춤형 지원^{중앙+지역}) 위기징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사업을 토대로 지역-중앙이 협업하여 맞춤형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
 - (금융)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과 협업하여 위기징후 지역 내 중소기업에 융자 및 보증 우대
 - * (한국은행) 중소기업 지원자금, (중진공) 지방시대도약자금, (기보) 보증 조건 우대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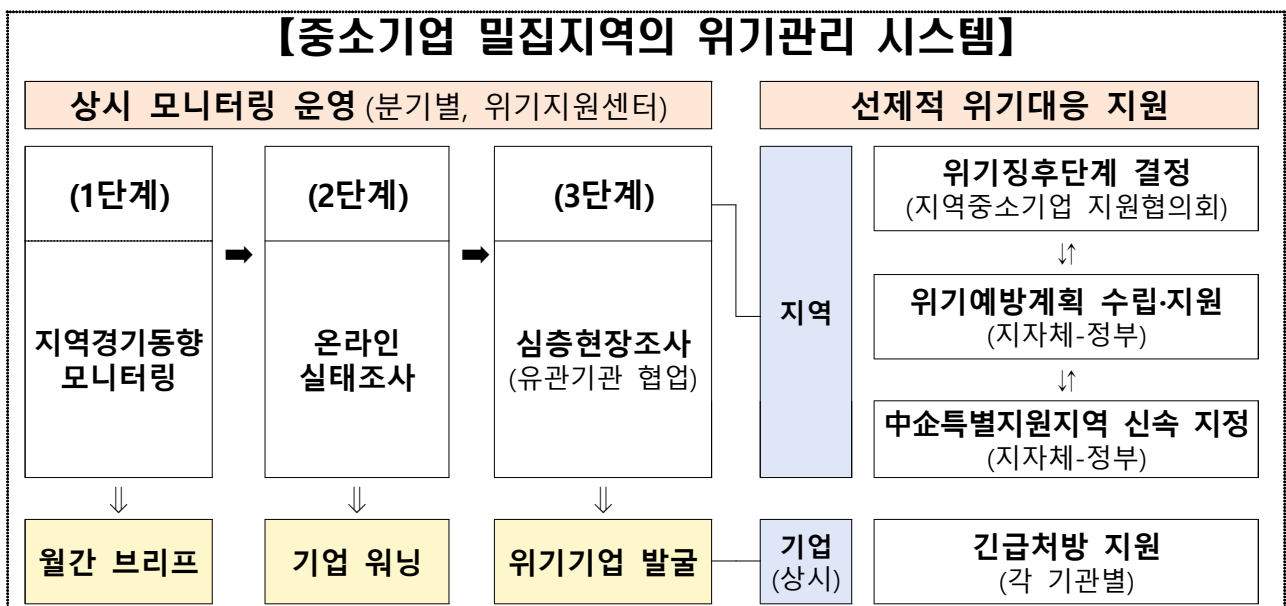
- 한국은행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연계 ('23년~)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인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원 대상에 '위기징후' 지역 소재 중소기업을 추가하여 지원

- (시설개선·바우처)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 및 뿌리기업 공정 개선 사업,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과 연계하여 우대 지원

□ **[사후지원 확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선**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정비 등을 포함한 『중소기업 구조개선 종합대책』 발표 예정('23. 上)

- (기본방향)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확실·신속한 지원(지정) 및 성공적인 경영정상화(해제)를 목표로 제도를 개편하여 실효성 제고
 - * 지역중소기업의 경영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23.4월 기준, 20개 지역 지정)
- (신속지원) 중기부 직권에 의한 지정 방식을 추가(현재는 지자체의 신청에 따른 지정), 연계 지원* 확충
 - * (현행) 조세감면, 국가·지방계약 우대, 중소벤처기업부 44개 지원사업 우대 지원
- (해제유도) 특별지원지역 해제 시에 해당 지역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조기에 자발적인 특별지원지역 지정해제를 유도



8 지역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 지원

□ [지역 밀착지원] 지역별 구조혁신지원센터 추가 및 지원강화

- **(기반강화)** 지역별 구조혁신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위기기업의 선제적 구조전환을 위한 지자체, 지역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네트워크 구축

* ('22) 10개 (서울, 인천, 수원, 고양, 대전, 광주, 전주, 대구, 부산, 창원)에서 추가 확대 검토

지역 협력 사례

• (대구) 미래차 전환 협력 프로젝트 : '25년까지 200개사 미래차 전환

- (참여기관) 대구시, 대구 구조혁신센터, 한국자동차연구원, 지능형 자동차 부품진흥원, 대구신용보증재단 등 19개 기관 미래차 전환 협의체 구성
- (추진내용) 선제적 구조개선 수요조사, 구조혁신 진단(사업전환, 디지털전환, 노동전환)기반 맞춤형 원스톱 패키지 지원(금융, 컨설팅 등)

- **(지원확대)** 자금·컨설팅 이외에도 구조혁신R&D 신설('23~), 사업전환 전담매니저*를 도입하여 사업전환 이행과정 밀착 관리 **신규**

* 유관 정책정보 제공 등 진단부터 사업전환 이행 완료시까지 전과정-전주기 관리

□ [제도 정비]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해 사업전환 제도 개편

- **(인정범위 확대^{신규})**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비즈니스모델 전환까지 사업전환으로 인정하여 신성장 혁신 분야로의 전환을 촉진

< 사업전환법 개정내용 >

(현행)	(개편)
표준산업분류 기준 새로운 업종으로의 변경 또는 추가만 제한적으로 허용	동일업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제품·서비스 도입, 제공방식 전환 등도 허용

- **(공동 사업전환 도입^{신규})** 다수기업의 공동 사업전환 제도를 신설하여 사업전환 승인 문턱을 낮추고 협업을 통한 성공적 전환을 지원

* 다수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전환 계획을 수립 → 공동 사업전환계획 일괄 평가·승인

9 지역소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 '풀뿌리'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 농공단지,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시군구 지역에 밀집한 소규모 중소기업

- **(농공단지 재생)** 기초지역에 주로 밀집된 농공단지 내 중소기업의 **낙후** 이미지 개선, 특화상품 개발 및 인력지원 등 활력 제고 방안 검토
- **(연고자원 활용)** 기초(시군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특화자원(지역 특산물, 밀집된 특정 업종 등)을 활용하는 지역중소기업 지원 확대
 - 지역 연고자원과 관련된 지역의 산학연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이 유지,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
- **(지역특구 확대)** 지역특화자원 활용 및 선택적 규제특례 적용으로 기초지역 기업의 성장 기반을 지원하는 지역특구 지정 확대 추진

* 나주 배산업, 충북 태양광, 청양 고추·구기자 특구 등 190개 지역특구 지정(~'23)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중소기업 연계 지원

* 지역 인구감소 해결을 위해 인구감소지역에 10년간 1조원씩 총 10조원 지원

- **(사업 연계)**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사업에 사업화, 제품 고도화, 인력 교육, 자금 등 지역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23)^{신규}

* ('23) 10개 기초 지자체에 251억원 (행안부 208억원 + 중기부 43억원) 투입

사례

• 강원 철원군의 힐링푸드 산업 육성

- (철원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스마트팜 및 저장고 설치
- (중기부) 지역대표 먹거리 제품개발 지원

- **(공동사업 추진)**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기업의 인력유입 촉진·유출 방지에 효과적으로 투입되도록 **행안부-중기부 공동기획('24~)**^{신규}

* (행안부) 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계획 평가 시 가점 부여
(중기부)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계획 수립 컨설팅 지원

◆ 정부-지자체-지역혁신기관 간의 『ONE-TEAM 혁신네트워크』 구축

10 지역 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정비

□ 정부와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간의 협력관계 강화

- **(거버넌스)** 지방중기청, 지자체 등 지역의 혁신주체* 간의 긴밀한 소통을 기반으로 하는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지자체, TP·창경센터 등 지원기관, 지역기업, 협·단체 등
 - 지방중기청-지자체가 공동으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기업의 현안 해결을 위해 협업하고, 중소기업 정책정보 공유채널 운영
- **(정책협력)** 정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역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기획·관리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의 ‘정책파트너’로 자리매김

사례

- **(충남)** 중소·중견기업(애로 기술 발굴)-스타트업(솔루션 제시) 연계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기획 및 추진
 - * 충남중기청(총괄기획) - 충남테크노파크(수요기업지원) - 충남창조경제 혁신센터(솔루션 사업화) - 충남북부상공회의소(수요발굴)

□ 지역중소기업 정책지원 기능 제고

- **(법적 기반 마련)** 『지역중소기업법』에 근거한 ‘지역중소기업 정책 협의회’(중소벤처기업부장관 주재)의 기능 및 역할, 구성 등을 구체화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주재)를 지역단위 중소기업 정책의 심의·조정 기구로 개편(지역중소기업법령 개정, '23. 下)

- **(현장전문 기관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지역 내 중소기업청으로 현장의견을 수시로 수렴하고, 기업-지역-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 수행

사례

-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지역혁신 선도기업 100' 전담 지원
 -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혁신 선도기업(지역별 4~9개 기업)을 관할지역 지방청이 전담 지원(규제애로 해소, 필요시책 기획 등)

11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기능 효율화

- **(기업 밀착지원)** 지역 테크노파크에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현장 점검기능을 신설하여 지역중소기업과의 접점 확대
- **(협업 강화)** 지자체·지방중기청과 정책기획·협의, 지역대학·연구기관과 산학연 협력,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 협업 확대
 - * 지역 테크노파크와 지역 지원기관 간 협업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3~)
- **(첨단장비 구축)**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노후 장비 교체 및 유휴·불용 장비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장비 보유기관 간 네트워크 활성화
 - * '27년까지 TP 보유 장비의 50% 이상을 첨단장비로 교체 / 장비 활용 수요가 있는 마이스터고, 특성화고, 지역기업 등에 이관 방안 마련

12 지역중소기업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전문연구기관 운영)** 지역중소기업 정책 전문연구기관을 지정·운영하기 위해, 『지역중소기업법 시행규칙』 제정 추진('23. 下)
 - 중소기업연구원(중소기업 지원이력), 시·도 연구원(지역기업 정보), 테크노파크(지역 위기장후 분석) 등과 공동연구 및 정책 발굴
- **(지역중소기업 데이터 관리)** 혁신성, 성장성을 기준으로 우수기업 현황 분석 및 지역주력산업별로 유형화하여 기업정보 축적
 - 기업정보는 신규사업 설계, 지원대상 기업군 설정, 지역별 지원 프로그램의 특성화 등 지역중소기업 육성정책의 근거로 활용

IV. 향후 추진계획

정책 과제	부처	시행시기
전략 1. 중앙-지역 협업 기반의 지역중소기업 육성		
① 지역주력산업 개편에 따른 기업육성 전략 재편		
▶ 지역주축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중기부	'23년~
▶ 지역 미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육성	중기부	'24년~
▶ 지역 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비중 확대	중기부	~'27년
② 지역중소기업 성장 프로젝트 300 추진		
▶ 프로젝트 방식의 지역중소기업 지원체계 구축	중기부	'23년~
③ 지역중소기업 전략적 협업 및 교류 강화		
▶ 협업모델 기획 및 전주기 지원강화	중기부	'24년~
▶ 협업매칭 플랫폼 구축	중기부	'24년~
▶ 협업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24년~
▶ 지역 우수기업 교류 네트워크 조직화	중기부	'23년~
전략 2. 지역중소기업의 창업-성장 기반 보강		
④ 지역 기반의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 지역특화 창업벤처밸리 조성 검토	중기부	'23년~
▶ 창업·벤처기업 집적지역 조성	중기부, 국토부, 교육부 등	계속
▶ 지역 창업인프라 효율화	중기부	'23년~
▶ 지역기업 투자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중기부	'23년~
⑤ 지역중소기업의 성장 여건 개선		
▶ 지역중소기업 수요 인력양성 및 공급	중기부, 과기정통부, 국토부, 교육부 등	'23년~
▶ 네트워크론 등 지역기업 정책자금 지원 확대	중기부	'23년~
▶ 지역기업의 수출기업화, 글로벌 공급망 진출 등 수출확대 지원	중기부	'23년~
⑥ 지역을 규제혁신 허브로 고도화		
▶ 규제자유특구 대상, 실증기간 확대 등 지역특구법 개정	중기부	'23년~
▶ 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중기부	'23년~

정책 과제	부처	시행시기
전략 3. 지역중소기업 위기관리 체계 고도화		
7 중소기업 밀집지역의 위기관리 시스템 강화		
▶ 현장 밀착형 위기징후 모니터링 확대	중기부	'23년~
▶ 중앙-지역 협력 기반 지역 위기관리 체계 정립	중기부	'23년~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 개선	중기부	'23년~
8 지역중소기업의 선제적 사업전환 지원		
▶ 구조혁신지원센터 확대 등 사업전환 지원강화	중기부	'23년~
▶ 「사업전환법」 개정을 통한 사업전환 제도 개편	중기부	'23년~
9 지역소멸 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의 활력 회복		
▶ 농공단지 기업 등 풀뿌리 중소기업의 성장지원	중기부	'23년~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지역중소기업 연계 지원	중기부, 행안부	'23년~
전략 4. 지역중소기업 혁신 지원체계 활성화		
10 지역 주도의 정책협력 네트워크 정비		
▶ 원팀 지역혁신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중기부 등	'23년~
▶ 지역중소기업 지원협의회 개편 등 지역중소기업법 개정	중기부	'23년~
11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업 지원기능 효율화		
▶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의 현장점검 기능 추가	중기부	'23년~
▶ 테크노파크와 지역 지원기관 간 협업프로그램 운영	중기부	'23년~
▶ 첨단장비 구축	중기부	~'27년
12 지역중소기업 정책연구 인프라 구축		
▶ 지역중소기업 정책 전문연구기관 운영	중기부	'23년 下~
▶ 지역중소기업 데이터 관리 강화	중기부	'23년~